

광주·전남 집배원 사망사고...대책 시급

광주·전남의 우체국 집배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 1월1일~2018년 12월24일) 동안 광주·전남 지역 집배원 101명이 공무 중 다쳤으며, 4명은 순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공상자는 2016년 19명·2017년 34명·2018년 4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과 업무 간 관련성이 인정돼 순직 처리된 집배원은 지난해 1명이었으며, 올해에만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영광군 묘

올해만 3명 순직...공상자도 매년 증가세 "집배용 전기차 보급확대·인력충원 필요"

량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근무에 나선 집배원 A(40)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A씨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앞서 지난 10월2일 오전 7시께 전남 영광군 주택에서는 집배원 B(46)씨가 전남 아간군무를 마친 뒤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올해 2월1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는 퇴근길에 나선 집배원 C(49)씨가 교

부 조직국장은 "운전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서 한 오토바이로 업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위험직 근무"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배업무용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직국장은 또 "최근 업무혁신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면서도 "근무지 여건에 따라 하루에 집배원 1명이 맡아야 할 우편물량이 500~1500여개고, 시간에 쫓기는 일이다 보니 정신·체력적으로 힘들다. 집배원 충원을 통한 업무량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中, 크리스마스 이브 목사 신도 17명 구류

중국 당국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쓰촨성 청두시의 한 지하교회 목사 신도 17명에게 형사구류(가장 높은 구류처벌 최고 37일 구금가능) 처분을 내렸다. 26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당국은 24일 청두시 추위(秋雨) 성악교회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은 내렸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공동체는 교회 예배당을 강제 점령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당국은 지난 9일 교회를 급습해 100여 명을 구금한바 있다. 이 교회는 중국에서 유명한 개신교 지하교회 중 하나로, 신도는 500~800명 가량이다. 당시 당국은 체포 이유로 국가권력 전복 혐의를 내세웠다. 이들 대부분 사람은 해당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제출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면 목사 왕이(王怡)에게 국가권력 전복 혐의를, 다른 신도들에게는 소란난동 및 불법 경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당국은 왕 목사의 아내에게는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가택연금 조치를 내렸다. VOA는 17명 이외 이 교회에 다니는 3명에게는 행정구류(가벼운 구류로 최고 14일 감금) 조치를 내렸고, 3명은 장기간 실종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추위성악교회에 대한 설명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英서 남자경찰 상대 성희롱 불만수백건 접수

영국에서 남성 경찰관 및 관계직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조직 내 성희롱 피해 신고가 지난 6년 간 수백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영국 경찰청 43곳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영국 경찰청 내에 접수된 남성 경찰관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신고는 450건에 달했다. 그러나 경찰청 43곳 중 28곳만 정보를 제공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국 공공부노동조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지역 경찰관 18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성적인 농담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5분의 1은 동료로부터 성적인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명 중 1명은 성관계를 강요당했으며, 12명 중 1명은 성적인 희의를 보이면 특혜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여성 경찰관은 가디언에 "대부분의 여성 경찰관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민하임 범죄학센터 교수인 제니퍼 브라운은 이와 관련, "경찰처럼 제복을 입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성희롱이 더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남성들이 독점하던 분야를 여성들이 침해한다는 생각과 남성 비종이 큰 업무환경 등이 부분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했다. 실제가 이렇지만 실제 징계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접수된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된 가해자는 24명에 불과했다. 74명은 행정소송을 치르게 됐지만, 48명은 퇴직 등으로 사실상 징계를 피했다.

中 푸젠성서 납치 버스 인도 돌진 8명 사망

중국 남부 푸젠(福建)성에서 25일 흥기를 든 남자가 납치한 노선버스를 인도로 돌진시켜 3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푸젠성 롱옌(龍巖)시 신뤄(新羅)구에서 이날 오후 3시20분께 주행 버스 안에 있던 피난민 승객들을 공격했으며 운전기사와 승객이 도망치자 버스를 몰고 300~400m 질주하면서 주변 차량과 충돌하고서 행인을 덮쳤다. 이로 인해 버스에 차인 경찰관 1명을 비롯해 8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하는 참사를 빚었다. 부상자 전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1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현장에는 롱옌시 정부 책임자들이 달려와 후속 조치를 진두 지휘하고 있다. 범인은 즉각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범행 동기과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콩 빈과일보의 법인이 당국의 철거 조치에 불만을 품고 사회에 대한 보복으로 이처럼 무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했다. 중국에서는 사회에 불만을 품거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굴뚝에서 410일째 농성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흥기탁 파인텍지회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교용 승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41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영산강환경청, 오염총량관리제 미준수 5개 시·군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7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5개 시·군이 오염원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속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순천시·장성군·담양군·강진군 등 전남 4개 지역과 경남 하동군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총인(T-P) 항목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특정지점·광범위 지역 오염원 모두 BOD의 할당부하량을 각각 2.94kg·36.91kg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T-P 할당부하량도 광범위 지역 오염원에서 0.256kg을 더 배출했다. 장성군은 특정지점 오염원의 BOD 할당부하량은 11.65kg 광범위 지역 오염원 내 T-P 할당량은 1.032kg를 초과 배출했다. 담양군과 강진군도 광범위 지역 배출오염원 내 BOD 측정에서 할당부하량을 각각 16.19kg·63.58kg씩 넘겼다. 하동군은 광범위 지역 배출오염원 내 T-P 할당량을 0.08kg 초과했다. 환경청은 ▲축산시설 내 사육가축 증가 ▲인구·물 사용량 증가 ▲오염물질 배출경로 변경에 따른 개별 배출량 증가 등이 할당부하량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청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진행한 이행평가를 토대로 오는 2020년 최종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에서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환경청은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초과 우려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문 교육·제도 설명회·기술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 경제구역의 하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오염물질만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는 9개 단위유역, 16개 지자체가 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다.

서은홍 기자

'긴급복지 선정' 재산 기준 10년만 40% 완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신청 가능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도시를 기준으로 일반재산 기준 1억35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긴급복지 제도는 내년부터 40% 완화돼 1억88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도시는 8500만원에서 1억18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 조정은 공시지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10년 만에 이뤄졌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구 기준 약 119만5000원씩 매월 생계지원이 된다. 의료지원 대상자는 회당 최대 300만원까지 2회에 걸쳐 지원된다.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에는요... 자폐치료장애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